

금타 화재 두달 지났는데...너무 태평한(?) 경찰

붕괴 우려 들어 현장 감식도 못하고 별다른 조치 고민조차 하지 않아 원인 분석 지지부진...두차례 압수수색·44명 조사에도 입건자는 전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가 발생한 지 두 달이 지나도록 경찰은 화재 원인 분석과 관련해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붕괴 우려를 들어 경찰 인원이 직접 내부로 진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에 대한 고민조차 하지 않아 현장 감식을 하나도 진행하지 못한 것이다. 공장 관계자 40여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혐의를 특정하지 못해 한 명도 입건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됐다.

광주경찰청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현장 감식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철거 작업이 시작되는 것과 동시에 현장감식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 21일부터 전담팀을 꾸리고 화재 경위 조사에 나섰다, 지금까지 현장 감식은 한 번도 진행하지 못했다.

광산구가 지난 5월 24일 공장 건물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거쳐 "붕괴 위험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경찰은 추가로 자체 조사를 통해 건물에 붕괴 위험이 있다고 판단,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으면 접근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굳혔다.

문제는 해체 작업은 기약 없이 미뤄졌다는 점이다. 금호타이어 측은 최근 해체 공사를 맡을 업체를 선정하고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관할청인 광주 시 광산구에 제출했으나,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보완 요청을 받았다.

경찰은 빠르면 이달 말부터 철거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이지만, 통상 해체계획서 심의가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 넘게 소요되며 해체계획서를 반려당하는 경우 시간이 더욱 늦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장 감식이 더욱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황이 이렇자 경찰이 화재 원인 조사에 대해 지나치게 태평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폭염과 빗물, 바람 등에 의해 현상이 자연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행정 절차를 거치는 사이 현장에 화재 원인을 추적할 단서가 소실돼버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서도.

일각에서는 '드루(무인비행장치)'를 비롯한 첨단 장비를 이용해 현장을 촬영 및 조사하는 안이 제기되고 있으나, 경찰은 "검도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경찰 인력이 직접 현장에 들어가서 육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 가며 감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경찰 입장이다.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공장 관련자 조사도 진척이 없다.

경찰은 최근 공장 관계자 8명을 추가 조사해 총 44명에 대한 조사를 거쳤으며, 2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벌여 화재 대응 지침과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고 화재 초기 대응 당시 상황에 대해 파악 중이다.

경찰이 지금까지 범죄 혐의점을 확인하고 피의자로 입건한 관계자는 한 명도 없다. 입건 대상자를 가리기 전에 현장 감식 결과를 종합하는 것이 먼저라는 이유에서도.

경찰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에 따른 절차를 따라가다 보니 시간이 한두달 지나간 것이지 절차상으로 지연된 것은 아니다"며 "경찰도 금호타이어가 조기에 정상화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으며, 최대한 서둘러 수사를 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양 계곡서 잠수하다 바위에 광 하반신 마비증상 20대 병원 이송

광양의 한 계곡에서 물놀이하던 20대가 잠수를 하다 물 속에 있던 바위에 머리를 부딪혀 하반신 마비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광양소방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2시 10분께 광양시 옥룡면 동곡리 동곡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A(24)씨가 물속 바위에 머리를 부딪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수심 1.5m 깊이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이었으며, 제자리에서 잠수를 하기 위해 머리를 물 속으로 넣다가 수중 바위에 앞머리를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직후 순간 의식을 잃었으며, 하지마비 증상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당시 동곡계곡 일대에는 안전요원 10여명이 배치돼 있었으나,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수심이 깊지 않다는 이유로 안전요원이 상주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광양시 등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가구당 추가 분담금 2억여원 내라니... "현대산업개발 공사비 증액 철회하라"

"공사비 미조정 약속 이행해야" '학동 참사' 4구역 조합원들 반발 사측 "원가 올라 인상 협의 불가피"

학동 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학동 참사)가 발생했던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최근 조합원들에게 2억여원의 추가 분담금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동4구역재개발 빠른사업추진단(추진단)은 7일 광주시청 앞 교차로에서 집회를 열고 "현대산업개발은 2022년 제시한 약속을 이행하고 공사비 등 분담금 증액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추진단은 지난 5월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원들이 모여 결성한 단체다.

추진단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조합 측에 공사비 증액을 요구해 왔다. 당초 6360억원(평당 508만원)이었던 총공사비를 6741억원(평당 619만원)까지 올려 달라는 것이다.

추진단은 공사비 인상 시 미분양에 따른 할인분양 손실액, 간축비 조달비용 등을 고려할 때 전용면적 84㎡기준 가구당 2억 4500여만원의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추진단은 현대산업개발이 당초 공사비를 올리지 않기로 약속했다가, 조합원들 불려 입장을 바꿨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조합은 '학동 참사' 1주기를 지난 2022년 6월 기준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유지하는 데 대한 안전을 총회에서 가결했다. 이 때 현대산업개발은 조합 측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실착공 이후 불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조정 없음' 등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듬해인 2023년 8월 조합은 '불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 가능' 조항이 담긴 1차 변경도급계약서를 총회에 상정했다. 이 때 공사비에 대한 조건이 변경된 사실이 별도로 고지되지 않아 조합원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총회에서 안전을 통과시켰다는 것이 추진단 주장이다.

추진단은 "조합은 잇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과 새로운 시공사 선정에 따른 사업 지연 등의 우려로 시공권 유지에 찬성했는데, 현대산업개발은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약속을 파기하고 추가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현대산업개발은 국민과 조합원에게 한 약속을 원안대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처음 제안했던 '공사비 원가 고정' 등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은 안타까우나 최근 수년간 인건비와 자재 등 공사원가가 크게 올라 현실적으로 기존 금액으로는 도저히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며 "학동 참사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절한 공사비만 받아 문제 없이 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조합은 오는 13일 정기총회를 열고 추가 분담금 이행 등을 공식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광주시 동구 학동 633-3 일대에 23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지난 2007년 조합이 설립돼 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곳에서는 지난 2021년 6월 9일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광주여대 폭발물 신고에 수색 작업 7일 광주시 광산구 광주여대 평생교육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의심 신고가 접수돼 군과 경찰 등 관련 기관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5·18 1주년 추모식 추진 구속 고교생들 44년만에 면소

5·18민주화운동 1주년인 1981년에 희생자를 위한 추모식을 추진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고등학생들이 44년만에 면소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A(61)씨, B(62)씨 등 3명에 대한 기소를 면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981년 5월 17일에 광주시 북구 임동 전남도 운동장에서 전교생에게 검은 리본을 달게 하고 추모식을 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혐

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는 A씨 등이 1981년 4월부터 광주시 내 각 고등학교에 유인물을 살포해 시위를 일으킬 목적으로 시국선언문을 만들고, 같은 해 5월 이를 배포해 시위를 선동했다는 등 내용이 담겼다. B씨의 경우 같은 달 16일 전남도에서 애국조화가 끝난 직후 단상으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하며 시위를 선동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광주지법은 1981년 12월 A씨 등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처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듬해인 1982년 광주지법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피고인들은 지난 2월 재심을 청구했으며, 광주지법은 A씨 등이 5·18민주화운동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재심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고 재심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 등에 대한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은 부당한 처벌 조치라는 반성적 고려에 의해 폐지됐다"며 "A씨 등의 행위는 5·18을 전후해 발생한 현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헌법의 존립과 현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북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